

문화산책

이당금

예술이 백그라운드 대표



“문화예술 활동은 개인의 취미이기도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기여가 큰 영역입니다. 수익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자기 성취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공공의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그런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래가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문화예술계는 위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6차 국무회의에서 놓여온 기본소득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던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부 예산 중 예술인 기본소득처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예술인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 장관은 “그런 사업이 있고 특히 청년 예술인을 중심으로 약 3000명 정도가 예술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다음 질문은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 “예술인 등록이 약 25만 명인데 지원 대상이 3000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세대 불균형의 예술 정책,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정확한 지적이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 이후 예술활동증명 제도 가 도입되면서 예술인은 창작활동준비금, 생활안정자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여러 복지 제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창작활동준비금은 약 2만명에게 연 300만원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예술인 전체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지원은 신청과 심사를 거쳐 일부만 선정되는 선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예술인을 문화 노동자(cultural worker)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연예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실업보험 제도인 ‘앵테르미랑 뒤 스펙타클(Intermittents du spectacle)’을 운영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약 507시간의 예술 노동을 증명하면 공연이 없는 기간에도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공연예술 노동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독일 역시 예술가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요양보험 가입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예술가 개인뿐 아니라 정부와 예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함께 분담한다. 그 결과 독일의 예술가는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일반 노동자와 유사한 사회보험 체계 속에서 보호받는다.

한국의 예술 정책이 여전히 지원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는 반면, 유럽의 여러 국가는 예술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제도화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현재 한국의 예술정책이 청년 예술가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청년 예술가에게 창작의 발판을 제공 하는 정책은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정책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조가 중장년과 원로 예술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낳고 예술 정책의 세대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예술의 축적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K-컬처 성과는 오랜 시간 실패와 실험,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사유의 작업을 놓지 않고 더께의 층을 이어온 중장년과 원로 예술가들의 축적된 시간 위에서 만들어졌다. 예술은 단기간의 성과로 완성되는 산업이 아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사유, 그리고 반복된 실패 속에서 비로소 깊이를 얻는다.

창작의 깊이가 형성되는 시기에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술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정책 역시 특정 세대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원칙은 분명하다.

예술은 취미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인식이다. 그리고 그 노동은 청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과 원로 예술가들의 시간과 경험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세대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예술 노동 전체를 인정하는 정책적 전환이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문화예술은 사회가 소비하는 가장 고급의 공공재다. 그 공공재를 생산하는 노동을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화선진국이라는 말 역시 공허해질 것이다.

기고

남궁윤

기획자-예술감독



광주비엔날레가 다시 도시를 찾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세계의 동시대 미술이 한 도시에 모이는 이 시간은 언제나 특별하다. 도시의 공기 속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르고, 예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광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와 만나는 예술 도시로 자리해 왔다.

동시대 예술의 움직임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거대한 전시장의 중심이 아니라 도시의 거리와 작은 공간들,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실험의 장들 속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난다. 독립 갤러리와 작은 전시 공간, 제도적인 프로그램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기획들은 아직 완전히 이름 붙여지지 않은 생각들이 태어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작가들은 완성된 결과보다 과정에 더 가까이 머문다. 하나의 작업은 실험으로 시작되고, 작은 전시는 하나의 질문이 된다. 때로는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생각들이 그 자체로 하나의 전시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시도들이 시간이 지나 도시의 문화적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은 특정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동시대 예술은 점점 더 거리와 작은 공간들 속에서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다. 베를린의

거리와 작은 공간, 동시대 예술의 또 다른 시작

프로젝트 스페이스나 브뤼셀의 독립 전시 공간들, 그리고 아시아 여러 도시의 작은 예술 공간들 역시 거대한 미술관이나 제도적 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술적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생각과 실험들이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는 장이 된다.

거리와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는 거대한 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우연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 잠시 멈추어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공간에서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예술은 일상의 시간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예술적 실험이 단순히 전시의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리와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을 조금씩 바꾸어 놓는다. 익숙한 골목과 오래된 건물, 평소에는 지나쳐 버리기 쉬운 공간들이 예술을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그 순간 도시는 단순한 생활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 있는 문화적 텍스트가 된다.

도시는 수많은 이야기와 기억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예술은 그 층위들 사이에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풍경 속에는 어떤 시간과 기억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는지, 작은 전시와 실험적인 작업들은 이러한 질문을 도시의 일상 속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때로 예술은 특정한 전시 공간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거리와 골목, 오래된 건물의 벽, 잠시 열리는

작은 전시 공간들 속에서 예술은 도시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장면들은 거대한 전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장면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의 문화적 감각을 확장시킨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작가는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존재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예술가들은 도시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공간을 새롭게 사용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실천하는 작가이자 행동하는 작가로 등장한다. 그들의 작업은 하나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제안이며, 때로는 도시와 사회를 향한 문화적 실천이 되기도 한다.

도시의 문화는 하나의 거대한 행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제적인 전시와 함께, 거리와 곳곳의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실험들이 서로 연결될 때, 도시의 문화 생태계는 조금씩 확장된다. 큰 전시가 도시의 예술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작은 공간들은 그 예술이 실제로 숨쉬는 과정에 가깝다.

동시에 이러한 작은 실험들은 도시가 세계와 대화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되기도 한다. 국제적인 전시는 도시를 세계에 소개하는 창이려면, 거리와 작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예술적 실험들은 그 도시가 어떤 감각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다 섬세한 장면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동시대 예술의 중요한 장면들은 종종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 거리의 작은 공간에서, 이름 없는 전시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새로운 시도 속에서, 그렇게 시작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한 도시의 예술을 만들어 간다.

취재수첩

공공 얼어붙은 광주 부동산경기 해법은

엄재용

경제부 기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광주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매물은 늘어가는데 거래는 계속 막혀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매물은 2만6000여세대로 1년 전 2만3000여세대로 10% 이상, 2년 전 1만8000여세대로 비교하면 40%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늘어난 매물이 좀처럼 소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도권과의 괴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폭등하는 집값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로 풀지를 않는 반면, 지방 대부분은 거래심리 냉각에 따른 미분양 문제와 투자 위축에 신음하고 있다.

물론 광주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광주에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크다. 지난해 인구가 140만명이 붕괴된 광주는 올해 2월 기준 138만9235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광주에는 빈집만 쌓여가는 것이다.

한번 떠난 청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전공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광주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다. 지금 광주는 수요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매수 심리 위축까지 겹쳐 있다. 수도권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지방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정교한 핀셋 대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일자리, 교육·문화·여가 인프라 조성 등 중장기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사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일일 1만본’ 생산 의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지난해 발생한 화재를 딛고 ‘일일 1만본’ 생산을 돌파했다고 한다.

화재 발생 9개월 만이자 복구 후 부분 재가동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생산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광주공장은 지난달 26일 1만565본을 생산하며 화재 이후 처음으로 1만본을 넘어섰다.

이는 화재 발생전 ‘일일 3만2000본’ 생산량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의미는 상당하다. 공장 근로자 1800여명 중 700여명이 4개 조 3교대로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는 등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나머지 근로자 중 200여명을 곡성공장과, 경기도 평택공장에 전환 배치하고 있다.

광주공장은 지난해 5월 17일 화재가 발생, 광주 2공장의 절반이 넘는 시설 피해를 입어 타이어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근로자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 고용불안에 처했지만 ‘고용안정을 최우선’한 사측의 ‘광주공장 화재 수습방안’이 담긴 로드맵’에 지난해 7월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1공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4000본을 생산하게 됐다.

지난 1월부터는 하루 6000본, 이번엔 생산 정상화의 척도라 할 수 있는 하루 1만본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현장 정리 및 설비 복구를 진행하는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 측과 현장들 묵묵히 지키며 헌신해 온 직원들의 공이 무엇보다 컸다.

사측은 현재 나머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총 6609억원을 투입, 하루 1만5000본, 연 530만본 생산 규모의 합평 신공장 1단계 건설 사업을 오는 202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완공 후 이 공장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자동화 설비와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춘 타이어 생산기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합평공장이 예정대로 진행돼 광주·전남통합시대, 광주의 완성차 제조 역량과 전남의 소재·부품 공급망을 연계하는 ‘초광역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핵심축이 되길 바란다.

광주 자치구 지역화폐, 실생활 많이 사용됐다

광주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핫’하다. 북구의 ‘부끄머니’가 발급 이를 만에 소진되며 ‘최단 기간’ 완판 기록을 세웠다.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난 3일과 4일, 80억원 규모의 발급분이 모두 동난 것이다. 지난해 발행 6일 만에 100억원이치가 모두 팔렸다.

다른 자치구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였다.

동구의 ‘동구랑페이’는 지난달 23일 발행했는데 닷새 만에 발행액 40억원이 모두 소진됐고 지난 1월 26일부터 판매한 40억원 규모의 남구의 ‘동행카드’도 완판까지 5일 걸렸다. 80억원 규모의 광산구 ‘광산사랑상품권’도 지난달 1일 발행 이후 24일 만에 전량 판매됐다. 지난해 완판까지 1~2개월여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판매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시대, 15%라는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자치구들이 관내로 제한했던 발급 창구를 광주 전역으로 늘리고 사용 가맹점 수를 확대하는 등 지난해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럼 이런 지역화폐는 그동안 어떻게 사용됐을까. 자치구들의 사용자 조사 결과 의식과 식료품, 의료·학원비 등 주민 실생활과 밀착한 업종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광주 지역에서는 총 193억8600여만원의 지역화폐가 사용됐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음식점으로 결제액이 34억9438만원(18.03%) 이나 됐다.

이어 의료·보건(12.35%) 23억9090만원, 편의점·마트(11.61%), 22억5141만원, 학원·교육비(11.57%) 22억427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특히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한 것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게 드러난 것이다. 광주 자치구들이 하반기에도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적극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효과 때문일 터다.



www.GwangNam.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nam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a list of staff members like Yang Jin-seok, Cha Jae-jin, Lee Seung-be, Kim Sang-hoon, and Choi Hyun-su.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